

韓-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안보·경제협력 강화

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14년 만에 관계 ‘최고수준’ 격상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필리핀과 ‘원전 동맹’ 기틀 마련



필리핀·싱가포르 국민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취임 후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군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0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체 11개 대화상대국 중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과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4년 만에 이들 5개국과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향상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2억달러, 투자 규모는 74억달러, 인적교류는 1018명이다.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 대상 지역이 됐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한국과 경제·산업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아세안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였다.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맺은 협정으로, 평시

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물류를 개선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고위급이 만나 5일 내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물류 허브다. 또 필리핀과는 수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맺어 ‘원전 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방산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인적개발·디지털 전환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간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생은 어디에?... ‘김건희 vs 이재명’ 소모전 된 국감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집중 질의 2주차에도 양상 지속 될 전망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여가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

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법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는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

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알았다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차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

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차장을 몰랐었다는 이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도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

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우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가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동훈, ‘인적쇄신’ 요구하며 연일 대통령실 압박

“국민 우려·걱정 불식 위해 필요” 대화에서 압박 전술로 전략 수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

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

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독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놔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태홍 기자